

“시대의 느티나무”



후보 추천서

추천 후보 이름	김동균(어쓰), 공헌 외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소속 청소년활동가들		
직업 (개인일 경우)	소속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연락처	휴대폰: 010-6899-6946(김동균)	전화:	
	E-mail: stupidkitty99@gmail.com		
주소	서울 동작구 사당동 1007-45호 승지빌딩 8층		

경력 사항			
구분	기간	소속	활동 내용
인권 관련 활동 경력 (단체 연혁)	2010년 5월 10일		교육감 후보들과 '학생인권조례 및 학생인권 정책협약식' 개최
	2010년 7월 7일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출범
	2010년 9월 27일		'학생인권유린 비호 법안' 학교장 절대권력 강화 법안! 학생인권조례 무력화 법안! 교육과학기술부의 초중등 교육법 개악 시도 규탄 기자회견 개최. 교과부의 체벌 합법화, 학교규정을 통한 학생인권 제한 등 학생인권 조례와 상충되는 상위법 개정 시도 움직임.
	2010년 9월 말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100인위원회 구성
	2010년 10월 6일		서울학생인권조례 시민제안마당 개최
	2010년 10월 18일		참교육연구소와 공동으로 '학생인권에 관한 학생, 교사, 학부모 의식 조사' 결과 발표. 수도권 지역 학생 1885명, 교사 1478명, 학부모 959명 대상 조사. 학생인권조례 제정 필요성에 대해 학생 88.6%, 교사들 88.7%, 학부모는 87.6%가 필요하다고 답해.
	2010년 10월 18일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 공청회 개최. 이후 주민발의안 확정
	2010년 10월 27일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운동 돌입 (청구인 대표 : 홍세화)
	2010년 11월 2일		81돌 학생의 날 맞이 '학생인권조례시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대토론회 개최
2010년 12월 24일		서울 학생인권조례 집중 거리 서명전 개최.	

2011년 1월 25일	<교과부 인권침해 정책, 청소년 긴급 성크토크대회> 개최
2011년 1월 26일	<교과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의 문제점에 관한 국회 토론회> 개최(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공동 주최). 이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악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11년 2월 8일	매일 학생인권조례 서명전 돌입. 주말 집중 서명전, 행사장 서명도 이어져
2011년 2월 16일	<학생인권조례의 시대, 교사가 말하다> 집담회 개최. '학생인권 vs. 교사 대립 구도'의 허구성을 초중고 교사들이 직접 나서 질타
2011년 3월 6일 · 7일	<경향신문> '아직도 먼 학생인권' 기획 보도. 서울본부 기획 참여.
2011년 3월 8일	서울 중암중 체벌사건 규탄 기자간담회 개최
2011년 3월 14일 · 16일 · 22일 · 23일 · 31일	<학생인권 시민 연속특강> 5회 연속 개최(경향신문·오마이뉴스·한겨레 공동 후원). 광노현 서울시교육감 (3/14), 이범희 용인 흥덕고(혁신학교) 교장 (3/16), 정혜신 정신과 전문의 (3/22), 하중강 한울노동문제연구소 소장 (3/23), 백창우 시인/작곡가(3/31) 초청 강연. 매회 시민 1백~3백여 명 참여로 학생인권에 관한 높은 공감대 형성
2011년 3월 19일	<실종신고 : 제대로 된 교육과 학생인권을 찾습니다> 청소년 집회 개최 (공동주최 : 청소년 인권행동 이수나로)
2011년 4월 7일	<학생인권설문조사(언어폭력, 차별) 결과 및 학생인권 침해 제보 사례> 발표.
2011년 4월 11일	<4월 학생인권의 찬란한 봄을 꽃피우자> 대시민 호소 기자회견 개최.
2011년 4월 19일	<민주주의와 인권의 역사, 학생인권으로 이어가자> 청계광장에서 국립 4.19묘지까지 주민발의 동참을 호소하는 도보행진 진행.
2011년 5월 10일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시한 마감(애초 4월 26일 마감이었으나 서울 중구, 강남구 재보궐 선거로 인해 14일 연장). 주민발의 성사 기준인 8만 1885명을 뛰어넘는 8만5281명의 서명 취합.
2011년 5월 20일	<서울시민의 힘으로 학생인권의 찬란한 봄을 꽃피웠습니다> 서울학생인권조례제정 청구인 명부 제출 및 대시민 보고 기자회견 개최
2011년 6월 22일	주민발의 보정(추가 서명) 돌입 : 유효 서명지가 7만1천여 장 안팎으로 확인되면서 닷새 간 추가 서명과 정보가 누락된 서명지에 대한 보정 작업 진행. 1만5천여 장을 목표로 추가 서명을 받았으나 3만장이 넘게 서명지가 모임.
2011년 7월 5일	서울학생인권조례 추가 청구인명부 3만여 장 제출
2011년 8월 4일	법제심의 거쳐 서울학생인권조례 청구 수리. 유효 서명인 수 총 97,702명으로 확정
2011년 9월 13일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은 흔들림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성명서 발표.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부당한 외압과 불필요한 반대

			중단 촉구.
	2011년 9월 16일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서울시교육청 초안의 문제점과 보완 사항 등을 정리한 의견서를 교육청에 전달. 인권의 원칙에 근거한 조례안 마련, 조례의 조속한 제정과 현장 안착을 위한 교육청 책무 확인.
	2011년 9월 30일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 서울시의회로 송부. 서울시교육청의 조례안 입법 예고는 언제 이루어질지 확실할 수 없는 상황.
	2011년 10월 5일		경기도학생인권조례 1주년,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 의회 제출에 즈음한 각계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개최. 교육청 발의 여부와 상관없이 주민발의안을 중심으로 서울학생인권조례를 시급히 제정할 것을 촉구.
	2011년 11월 22일		일부 종교 사학 단체/교원단체 등에서 학생인권조례 내 차별금지 사유 중 성적 지향과 임신/출산 등에 문제제기. 서울시 의회에서 원안을 후퇴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었음. 서울 학생인권조례 원안통과를 요구하는 의견서 교육상임위에 제출
	2011년 12월 14일 ~ 19일		서울 학생인권조례 원안 통과를 위한 서울시 의회 농성 돌입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 주최)
	2011년 12월 17일		서울 학생인권조례 원안 통과를 요구하는 청소년 플래시몹
	2011년 12월 19일		서울 학생인권조례안 서울시의회 본회의 통과 (재석 87, 찬성 54, 반대 29, 기권 4)
기타	~		
주요 경력	~		

* 직업 경력과 인권 관련 활동 경력의 구분이 필요 없을 경우에는 하나로 써주셔도 됩니다.

* 칸이 모자랄 경우에는 추가하여 써주십시오.

위와 같이 1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이돈명인권상 후보를 추천합니다.

2011년 12월 23일

○ 추천하시는 분에 대한 간략한 인적 사항을 써주십시오.

추천인 이름	배경내	* 개인 이름 또는 단체명	
직업 (개인일 경우)		소속	인권교육센터 들,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연락처	휴대폰: 017-214-3550 E-mail: hregang@hanmail.net		전화: 02)365-5412
주소	서울 중구 중림동 398-17 3층		

추천 사유

○ 위 추천 후보의 활동이 인권의 관점에서 이 상의 후보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등을 2페이지 이내로 자유롭게 써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가장 화제를 모았던 드라마는 ‘뿌리 깊은 나무’였습니다. 한글을 만들어 반포하려는 임금 세종과 무지한 백성에게 글자라는 위험한 무기를 안겨줄 수 없다는 양반 세력과의 쟁투를 다룬 드라마였습니다.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한글을 반포한 세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백성들은 그들의 지혜로 길을 모색할 것이고 싸우고 또 싸울 것이다.” 백성의 지혜는 글자를 아는 힘으로 더욱 굳건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백성과 글자의 만남을 나라의 뿌리로 만들고자 하는 세종의 마음은 학생과 인권의 만남을 민주사회의 뿌리로 만들고자 하는 학생인권조례의 마음과 꼭 닮았습니다.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인권을 알고 몸으로 익힐 수 있는 학교문화를 만들어내지 않고서야 우리 사회의 인권문화와 민주주의도 뿌리 내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경기도교육청 발의로 경기도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것이 지난해 9월입니다. 그리고 올해 서울에서는 주민발의로 성사된 학생인권조례안이 지난 12월 19일 시의회를 극적으로 통과하였습니다. ‘학생이 무슨 인권이냐!’라는 인식이 팽배한 한국사회에서 학생인권을 전면에 내걸고 시민들의 자발적 서명을 모아 조례를 만든다는 구상은 사실 실현되기 어려운 꿈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정작 당사자인 학생들은 유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서명에 참여하기도 힘든 조건에서 단 6개월만에 서울시민 유권자 1%(8만 2천여 명)의 서명을, 그것도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까지 자세히 기재해야 하는 서명을, 온라인도 안 되고 팩스 전송도 안 되는 서명을 모아낸다는 것은 좀체 넘기 힘든 장벽처럼 보였습니다. 주민발의 운동이 시작되었을 때 많은 이들이 절레절레 고개를 저었던 이유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와 그 중에서도 가장 열심이었던 청소년 활동가들은 두 번의 기적을 이루어냈습니다. 한 번의 기적은 기어이 10만여 명의 서명을 받아내 주민발의를 성사시킨 일이었고, 또 한 번의 기적은 소극적인 의회와 보수단체들의 엄청난 공세를 뚫고 조례 제정을 이루어낸 일이었습니다. 그 기적은 돈도 없고, 자원도 없고, 힘도 없는 청소년 활동가들의 진정어린 호소와 집념 어린 활동이 일구어낸 감동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에는 38개에 달하는 단체가 있지만, 모두가 주민발의 서명운동에 적극 참여하지는 못했습니다. 내로라하는 큰 단체들이 이름만 걸어두거나 시늉만 하는 모양새도 있었습니다. 서명 종료 기간은 불과 1개월 앞두고서도 목표 인원의 절반에도 이르지 못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체념하고 서둘러 짐을 쌌습니다. 남겨진, 아니 기어코 남은 사람들도 초조함에 몸부림치며 ‘함부로 길을 나서 길 너머를 그리워한 죄’를 스스로 탓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그리고 개인적으로 본부를 찾아온 청소년 활동가들은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서명운동에 나섰습니다. 매일 매일 밤늦은 시간까지 무거운 가판대와 서명판, 홍보물 등을 직접 손에 들고 지하철을 수없이 갈아타면서 서울 시내 곳곳에서 서명을 호소했습니다. 때로는 서명지를 찢고 욕설을 하고



가는 어른들의 모습에 상처받기도 하고 피로에 지쳐 응급실에 실려가는 이들도 여럿이었습니다. 눈꺼풀이 절로 감기는 피곤함을 딛고 온라인에서 소식을 전파하고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그런 열심들이 시민들의 마음을 움직였나 봅니다. 서명 종료 기간을 일주일 앞두고 서명지가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서울교구 나승구 신부님을 비롯해 여러 신부님들이 본당 문을 열어 시민 서명을 받을 기회를 열어주시기도 했고, 문정현 신부님과 오두희 님은 여의도 촛불미사가 진행되는 현장에서 학생인권조례 서명을 직접 받아주시기도 했습니다. 노동조합에서도 힘든 싸움의 와중에 자녀들과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한 학생인권조례 서명을 받아주셨습니다. 론스타 투기자본 문제로 파업을 진행중이었던 외환은행 노조에서 서명지를 모아오신 조합원은 너무나도 열악한 조건에서도 밝은 웃음을 잃지 않는 청소년들의 모습을 보시고는 감동을 받으셔서 추가로 더 서명을 받아주시기도 했습니다. 놀랍게도 캐나다, 독일, 미국 등 외국에서도 서명지를 직접 작성해 국제우편으로 보내온 시민들도 계셨습니다. 그렇게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운동은 기성 단체는 물론 시민들의 마음을 두드렸고 결국 역전만루홈런에 성공했습니다. 서울에서는 급식지원조례, 시청광장 개방조례에 이어 세 번째로 성사된, 그리고 소수자 인권을 전면에 내건 조례로서는 최초로 주민발의에 성공한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감격도 잠시, 서울학생인권조례의 의회 통과가 불투명해지는 위기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8월 광노현 교육감의 전격 구속, 9월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정국, 10월 서울시장 재선 등으로 이어진 국면으로 민주 대 보수의 격돌이 계속되었습니다. 광노현 교육감의 구속으로 교과부 장관이 지명한 부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에 적대적인 모습으로 돌아섰고,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를 주도했던 보수단체들은 다시 학생인권조례를 할퀴면서 정치쟁점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학생인권조례 저지 범국민연대'까지 결성되면서 조례의 취지를 악의적으로 왜곡, 선전하는 일들이 계속되고 대형교회들까지 가세해 의회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안 그래도 학생인권조례에 소극적이거나 냉소적이었던 시의원들이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이 때 청소년 활동가들의 저력이 또다시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청소년 활동가들은 왜곡된 논쟁구도를 바로잡고 인간의 존엄이라는 원칙을 지켜내기 위해 시의원들을 설득하고, 언론 기고글을 조직하고,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시민들의 관심을 호소했습니다. 의회 심의를 전후로 여러 차례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청소년 활동가들은 '차별과 폭력 없는 교육'의 중요성을 알려나갔습니다. 12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조례 통과마저 불투명하던 상황에서 12월 19일 마침내 주민발의안에 비교적 가까운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주저하던 시의원들의 마음을 돌려세운 이들 역시 바로 온몸으로 절실함을 전했던 청소년 활동가들이었습니다.

저는 1998년 처음으로 인권활동을 시작하여 인권교육의 확산을 위해 힘쓰고 있는 활동가입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는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의 공동집행위원장 역할을 맡아 조례 제정운동을 계속해 왔습니다. 지난해 경기도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될 때 광노현 교육감과 함께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던 경험을 계기로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 운동도 책임지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14년째 인권활동을 하고 있지만, 올해 조례 제정 운동만큼 파란만장했던 운동은 없었습니다. 주민발의 운동 기간 내내 따라다녔던 서러움과 외로움은 결국 기적처럼 총만함과 감격으로 바뀌었습니다. 무엇보다 대중운동, 생활운동의 기반이 그다지 없는 인권운동이 주민발의운동을 시도하고, 학생인권이라는 주변적 의제를 사회의 중심 의제로 변화시켜내고, 결국 아래로부터 민주주의에 기반하여 조례를 최종 성사시킨 것은 한국 인권운동의 역사에서도 새 지평을 연 것이라 생각됩니다. 서울학생인권조례 서명을 받으면서 내걸었던 핵심 구호는 '가장 인권적인 것이 가장 교육적이다.'였습니다. 인권은 곧 교육이고, 교육은 곧 생활이라는 이야기가 많은 이들의 가슴에 가 닿았고, 운동단체뿐 아니라 일반 시민의 마음을 얻는 결실을 맺은 것은 앞으로 인권운동에 소중한 자원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 소중한 과정에, 진정성과 열정 하나로 함께해준 청소년 활동가들은 존재 자체가 감동이었습니다.

격랑을 뚫고 가까스로 정박지에 도달한 서울학생인권조례라는 함선은 또다시 좌초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과 그의 '아바타'로 불리는 이대영 부교육감이 의회에 조례 재심의를 요구하려는 꼼수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긴 마라톤을 끝냈다 싶었는데 다시 레이스가 시작되려 합니다. 잠시

숨 돌릴 틈도 없이 또 다시 지난한 싸움을 이어가야 하는 조례본부 활동가들, 특히 청소년 활동가들에게 ‘이돈명 인권상’ 수상은 더 없이 큰 위로와 격려의 박수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청소년 인권활동가들이 있기에 인권운동의 역사가 이어지고 더욱 풍성해지리라 믿습니다.

더불어 청소년활동가들은 그동안 자기들이 직접 써서 펴낸 책의 인세를 모으고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하나둘씩 모아 보증금 5백만원 짜리 조그만 사무실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서울학생인권조례를 만들어내고 지켜내는 일뿐 아니라 다른 소수자들의 인권 문제, 한진중공업 투쟁 등에도 적극 결합해 왔습니다. 아무런 기반도 없이 인권운동의 새 영역을 개척해 온 청소년활동가들이 교통비, 사무실 임대료 내느라 여러 아르바이트를 전전해 왔습니다. 이들에게 ‘이돈명 인권상’ 수상은 인권운동의 선배들이 내어주는 따뜻한 동지가 되어주리라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인권이 꽃피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생인권조례’ 제정 청구인이 되어 주세요.

자 격_ 서울시민 누구나 (단 19세 이상)
 목표인원_ 약 81,885명 이상(서울시민의 1%)
 중요사항_ 자필로 서명한 서명용지 원본이 필요합니다.

적극적인 학생인권 지킴이가 되는 방법!

서울시민의 1%, 약 10만 명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자필서명을 받아야 하는 주민 조례제정 청구가 쉬운 절차는 아니지만 서울시민의 힘으로 학생인권이 보장되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학생인권의 주인공인 청소년의 참여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 만 19세 미만 청소년도 참여할 수 있는 입법청원 서명운동에 동참해주세요!
- ▶ 주변 친구와 어른들에게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세요!
- ▶ 서울운동본부에 꾸려진 청소년위원회 활동에 동참하실 수 있어요! 청소년위원회에서는 의견 수렴(학생 대상 설문조사 및 학생인권침해사례 수집 등), 선전 홍보(온라인 토론방운영, 캠페인 활동 전개, 토론회 등) 등의 활동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홈페이지 : www.sturightnow.net
 전 화 : 02-582-8884
 이 메 일 : h3388@gmail.com
 주 소 : (156-090)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1007-45 승지빌딩 8층

서울시민의 힘으로
학생인권의 시대를 열자



“가장 인권적인 것이 가장 교육적입니다.”

서울시민의 힘으로 학생인권이 보장되는 서울학교 만들기
 학생인권조례 제정 서명운동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이제 학교가 달라집니다.

'학생인권조례'로 130만 서울 학생이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체벌, 두발규제, 강제야자, 열악한 시설...

그동안 학교는 '인권은 교문 앞에서 멈춘다'라는 말처럼 사람이 살아가는데 최소한으로 보장되어야 할 인권이 지켜지지 않는 공간이었습니다.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학교현실, 가장 큰 피해자는 학생이었습니다. 숨쉬기조차 답답한 학교 현실에서 학생은 자기 삶의 소중함과 배움에 대한 즐거움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와 교육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학교는 달라져야 합니다. 무너지는 교육을 살리기 위해서 학교는 변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즐겁게 배울 수 있는 학교, 학생들이 신나게 동료할 수 있는 학교로 바뀌어야 합니다.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 130만 서울학생들의 인권이 숨 쉴 수 있는 서울교육은 가능합니다. 그 시작이 바로 학생인권조례제정입니다.



학교에서 폭력과 차별이 사라집니다.

●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권리 :

학생인권조례는 폭력으로부터의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민합니다. 학생의 신체와 인격을 무너트리는 체벌과 집단 괴롭힘 등의 폭력, 이제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폭력적인 학교문화를 평화적인 학교문화로 바꿀 것입니다.

●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소수학생의 권리보장 : 여성이라는 이유, 집이 가난하다는 이유 등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기는 차별, 학생인권조례가 차별 없이 모두가 즐거운 학교를 만듭니다. 특히 장애, 다문화 등 소수학생이 보다 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학교의 문턱은 더욱더 낮춰질 것입니다.

● 개성을 실현할 권리 : 학생들은 각각의 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억압적인 학교문화는 학생이 다른 학생과 구별되는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못하게 합니다. 학생인권조례는 두발규제, 용의복장 규제 등의 구시대적인 학교문화를 바꾸고, 학생 개개인이 다양한 자신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학교를 만들 것입니다.

학생의 자율적인 학습권과 건강이 보장됩니다.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 학교에서 진행되는 0교시, 강제보충·야간학습은 학생의 아침밥과 잠을 빼앗아 학생들의 건강을 해쳤고, 무엇보다 학생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학습권을 빼앗았습니다. 0교시를 없애고 보충수업과 야간학습에서 학생의 선택을 보장하겠습니다. 학생의 건강을 보장하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율적 학습권이 보장되는 학교를 학생인권조례가 만듭니다.

대화와 소통의 학교운영이 실현됩니다.

의사표현의 자유, 자치활동의 권리, 학생들이 학교규정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 학교의 주인은 교장 선생님이 아닙니다. 학생 역시 학교의 주인입니다. 학생인권조례는 일방적인 학교운영이 아닌 대화와 소통이 있는 민주적인 학교문화가 만들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학생이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거나 학생회 등 학생자치활동의 권리를 보장하여 학생들이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학교와 교육청이 학생인권 보장을 책임지는 주체가 됩니다.

학교 내 인권교육의 실시, 학생인권보장을 위한 교육감의 실천계획 작성, 학생인권을 호관 설치 : 학생인권침해의 당사자이자 방관자였던 학교가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달라집니다. 학교에서는 학생인권 관련 교육이 실시되며, 교육청에서는 학생인권심판을 파악하는 실태조사가 진행되고 인권심장을 위한 계획이 마련되고 집행될 것입니다. 또한 학생인권옹호관이 생겨 학생인권 관련 전문적인 인사가 학생인권문제를 조사하고 권고를 내릴 수 있도록 권한이 부여됩니다.

학생과 교사가 함께 행복한 학교를 만듭니다.

학생들에 대한 불필요한 간섭과 규제의 권을 풀을 때 교사는 수업 연구와 학생 상담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강제 보충과 강제 어지에서 벗어날 때 교사도 부담 노동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제대로 된 수업권을 보장받을 때 교사들의 교육권도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교사로부터 존중받는 학생은 당연히 교사를 존중하여 함께 행복한 학교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개성이 꽃피입니다.



[경향신문] 교육·입시“학내 집회 허용”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안

심혜리 기자 grace@kyunghyang.com

입력 : 2010-10-18 22:21:16 | 수정 : 2010-10-18 23:23:37

인권본부, 시안 만들어 광노현 교육감에 제출키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등 40여개 단체가 모여 발족한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 서울본부’(인권본부)가 주민 발의로 제정할 ‘서울학생인권조례안’ 시안을 내놓았다. 시안은 학생들의 학내 집회를 허용하고 두발 자유화 등을 명시하는 등 학생의 권리를 폭넓게 보장했지만 보수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인권본부는 18일 기자회견을 열어 조례안 시안을 발표하고, “헌법,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교육기본법 등에 근거해 조례안 시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시안은 총 5개장 50개조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학생들이 집회를 여는 등 학교 안팎에서 모임이나 단체활동 및 정치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 △학생의 두발·복장 자율화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는 행위 금지 등이다. 이 밖에도 학교가 학생에게 특정 종교과목의 수업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학생들이 교육청의 교육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인권본부는 광노현 서울시교육감에게 조례안 시안을 제안한 후 시민들을 상대로 서명작업을 펼 계획이다. 서울시 유권자 1% 이상의 서명을 받으면 교육청은 조례안을 정식으로 시의회에 발의해야 한다. 홍세화 ‘학벌없는사회’ 대표는 “반인권적 상황에 놓인 학생들을 위해 인권조례 제정에 나서게 됐다”며 “교육청의 발의를 기다리기보다 시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자는 취지로 주민 발의 형식을 취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복균 신도림중 교장은 “학생들이 집회를 열 수 있고 교육청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부분 등은 추후 협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도 “학생의 인권이 신장돼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학생의 권리 보장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도 함께 규정돼야 한다”며 “학생들의 권리 행사가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등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본부는 이날 학생인권에 대한 학생·교사·학부모의 의식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전교조 참교육연구소가 전국의 교사 1478명, 수도권 학부모 959명, 중·고생 1885명을 대상으로 9월29일부터 10월7일까지 조사한 결과 학생의 88.6%, 학부모의 87.6%, 교사의 88.7%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엄민용 전교조 대변인은 “학생, 교사, 학부모들은 대체로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져야 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학생인권과 교권이 대립하는 것이라는 인식은 잘못된 면이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5일 학교 내 체벌 금지, 강제 야간자율학습·보충수업 금지, 두발·복장의 개성 존중 등의 내용을 담은 학생인권조례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포했다. 서울시교육청도 연말까지 조례안 초안을 내놓기로 한 상태다.

학생인권조례 발의안 주요 내용

- 교내외 집회 개최 및 참여 보장
- 보충수업·자율학습 선택권 보장
- 두발·복장 자율화
- 학생 동의 없는 소지품 검사 금지
- 학내에서 특정종교강요 금지
- 교육청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 보장
- 안전한 급식 제공받을 권리 보장

<경향신문>

[아직도 먼 학생인권](上) 변하지 않는 학교

정유진·박준철·박효재 기자 2011-03-06 22:06:23

• 두발·복장·소지품 검사 '일상'... 벌점 쌓이면 퇴학

공부, 공부, 그리고 또 공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학교가 학생에게 요구하는 건 공부뿐이다. 어른들은 말한다. “조금만 참으면 된다”고, “나도 겪어봤다”고. 과연 그런가. 행복은 성적 순일까. 머리가 길면 공부를 못할까. 공부 못하는 학생은 차별을 받아도 되는 걸까. 대한민국에서 초·중·고교를 다녔거나 다니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해봤을 고민을 두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학생은 1분, 1초도 방심할 수 없다. 학교 측의 배려는 인식하고, 자신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권리는 미약하기 때문이다.

등굣길에 오르는 순간부터 아이들은 학생이란 이유만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자신의 **이름** 석 자를 드러내야 한다. 교복 상의 **가슴** 부분에 박음질한 이름표 때문이다. 서울 ρ중학교 김모군(14)은 “요즘 같은 세상에 아무에게나 내 이름을 알도록 하는 게 조금 무섭다”고 했다. **명찰** 박음질은 2009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사생활의 자유 제한과 범죄 노출 우려’를 이유로 시정을 권고한 사항이다. 그러나 여전히 상당수 학교가 “탈·부착식 명찰은 쉽게 잃어버릴 우려가 있다”며 학칙으로 박음질을 규정하고 있다.

교문 앞에 도착하면 크게 한 번 심호흡을 해야 한다. 교문 양옆으로 늘어선 선도부는 머리 길이, 치마 길이를 cm, mm 단위까지 잰다. 경기 안양 ρ고 김모양(17)은 자로 잔 결과 치마가 규정보다 1cm 짧아 교사에게 적발됐다. 규정에 맞추려 밀단을 수선해 늘려놓기까지 했는데, 또 벌점이다. 교사는 “걸리기 싫으면

자살한 학생들이 남긴 유서

어른의 아버는 (이틀 동안) 20시간 일하고 28시간 쉬는데 어린이인 나는 27시간30분 공부하고 20시간30분 쉰다. 왜 어른보다 어린이가 자유시간이 적은지 이해할 수 없다. 숙제가 태산 같다. 공부를 하는데 임팩이 잘 몰라 고민스럽다. 그만 다니고 싶다. 비웃속의 물고기가처럼 자유로워지고 싶다. - 2002년 자살한 초등학생 유키

좁디 좁은 교실에 텅텅 4대, 히터 2대. 같은 곳에서 각기 다른 재능을 지닌 아이들이 오직 책 가지막 배우고 있었어. '대학 가는 법.' 내가 죽는다고 말하는 건 아무것도 없을 거야. 선생님들의 강격한 몽둥이도, 선생님들의 강격한 두발 규제도, 선생님들의 공부공부소리, 사회의 공부공부공부공부... 같은 머리, 같은 옷, 그리고 같은 공부. 슬퍼, 이 세상어, 그리고 내내들어. - 2007년 대구의 중학생

너무너무 힘들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멍청한 경찰, 선생님어 되고 싶었는데... 우리나라 교육제도도 못간다. 어쩔 수도 시행해도 그 법에 그 나뭇이다. 학생들을 생각해서 교육제도 만드는 사람은 없으니까. - 2003년 전주 지역의 고등학교생

서울 ρ중학교의 학칙상 복장규정

두발

- 남학생은 앞머리가 눈썹에 닿지 않는 정도(5cm) 소모트형. 옆머리는 귀를 덮지 않고, 뒷머리는 짧고 단정하게
- 여학생은 귀밑 15cm 단발. 머리핀으로 뒷머리를 묶어서 안되며, 머리핀은 부착물이 없는 검정색 머리핀만 가능
- 염색·탈색 금지, 무스·젤 사용 금지

신발

- 흰색, 검정, 갈색 계통의 운동화나 학생용 단화
- 발보다 3cm 이상 크거나 앞굽 1.5cm 이상, 뒷굽 3cm 이상 금지

기타

- 실내에서 외투를 입지 않는다
- 흰색 또는 사각형 가방은 메지 않는다

허리 치수 하나 더 큰 거 사든가”라고 말했다.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 날을 잡아 검사하는 날이면 학교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 인천 사고는 개학하자마자 실시한 복장검사에서 머리가 길다는 이유로 학생 150여명을 쫓아냈다. 쫓겨난 학생들은 4교시까지 수업을 받지 못했다. 이 학교의 한 학생은 “머리를 깎아도 ‘바리깡’을 댄 흔적이 없으면 다시 깎게 하고, 심지어 자퇴까지 권유했다”고 말했다.

선도부와 전쟁을 치르고 겨우 도착한 교실. 난방을 하지 않아 너무 춥다. 하지만 교실에서는 교복 재킷 위에 코트나 점퍼를 입을 수 없다. 학칙으로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집에서 가져온 무릎담요를 두른다. 이것도 걸리면 압수다. 서울 ㄴ여고 이모양(18)은 “추워서 못살겠다고 항의했더니, 학교에서 5만원씩 걸어 ‘학교 패딩’을 사자고 제안했다. 집에서 가져온 패딩 점퍼는 몽땅 압수해가면서 왜 돈 내고 새걸 사라는 건지 모르겠다”며 고개를 저었다. 서울 ㅎ여고 ㄹ교사는 “수업시간에 담요나 점퍼를 뒤집어쓰고 자는 걸 막기 위한 것”이라며 “또 가르치는 입장에서 학생들이 알록달록한 옷을 뒤집어쓰고 있으면 시선이 분산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같은 논리라면 대학생들도 교수의 시선이 분산되지 않도록 똑같은 옷을 입어야 할 것이다.

학생의 일거수일투족은 모두 벌점으로 수치화된다. 학생증을 안 가져와도 벌점, 학생용 화장실이 붐벼 교사용 화장실에 들어가도 벌점, 줄다가 걸려도 벌점이다. 벌점이 쌓이면 강제전학이나 퇴학을 당할 수도 있다. 상(賞)점도 있긴 하다. 담배 피우는 친구를 금연의 길로 이끌면 상점 1을 받아 벌점을 만회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친구가 담배 피웠다는 사실을 고자질하는 셈이 된다.

수업 중간에 갑자기 문이 열리고 생활지도 교사와 선도부 4~5명이 들이닥치면 소지품 검사가 시작된다는 신호다. 인천 ㄷ중을 졸업한 이모양(16)은 “선도부가 책상 속, 사물함, 교복 주머니까지 탈탈 뒤지는 동안 우리는 범죄 용의자들처럼 ‘머리에 손을 얹고’ 대기해야 했다”고 말했다.

학생들이 모든 규제를 없애라고 요구하는 건 아니다. 단지 이해 안되는 규정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머리가 규정보다 1~2cm 길다고, 치마 길이가 1cm 짧다고 도대체 무슨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어른들은 학창시절로 돌아가 다시 한번 그렇게 살라고 하면 절대 안 할 거면서 왜 우리에게만 똑같은 걸 강요하나요? 시대가 바뀌었는데, 학교만 그대로예요.” 인천 ㄱ중을 졸업한 김모군(17)이 고등학교 입학에 포기한 이유다. 중학교 3년도 겨우 버텼는데, 고교 예비소집일날 학교에 가니 신입생 모두에게 “학칙을 어길 경우 어떤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쓰라고 했다. 그 길로 미련없이 학교를 떠났다. “용기가 없어서 문제 제기는 못하겠고, 그냥... 도망친 거죠.”

그러나 김군 같은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든 말든 오늘도 학교는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과 마찬가지로 굴러간다. 장기하의 노래처럼 학교 측이나 교사들은 “별일 없이 산다”.

<참세상>

내 손으로 만드는 학생인권조례...주민발의 현장을 가다

청소년, “인권조례 절실”...4월26일까지 8만2천명 서명필요

김도연 기자 2011.03.09 00:33

“차별과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에 동참해 주세요.”

쌀쌀한 바람이 오가는 이들의 발걸음을 재촉하던 8일 오후, 신촌역 앞에서는 서울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서명운동이 한창이다. 한 명이라도 더 붙잡아 서명을 받고 싶지만 3월달지 않게 추운 날씨 때문에 지나치는 이들의 걸음을 멈추게 하기가 쉽지 않다. 주민발의 기한을 49일 남겨둔 이날, 여섯 시간 동안 거리에서 받은 서명지는 100여 장 남짓. 조례제정을 현실화하기 위한 서울시 유권자 1%, 8만 2천 명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멀고 걸음은 더디기만 하다.

때문에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서울본부)는 지난달 8일부터 매일같이 서울 곳곳을 돌며 거리 선전전과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시민단체 모임, 노동단체 집회, 강연, 문화공연 등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간다.



거리에서 서명을 요청하고, 시민들에게 직접 말을 걸어 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과 의미를 설명하는 이들은 대부분 청소년 활동가들이다. 이날도 신촌에서 거리 선전전을 진행한 일곱 명 중 다섯 명이 청소년이었다. 정작 자신은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서명에 참여하지 못하면서도 이들이 서명을 받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서울 시내를 누비는 이유는, 학생인권조례가 이들에게 그만큼 절실하기 때문이다. 덕분에 청소년 활동가들은 요즘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랄 정도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에서 활동하는 다영은 거리 선전전 시작부터 대부분을 함께하고 있다. 그는 지금 이 활동이 지금까지 했던 어떤 활동보다 재미있다고 말한다. “이제까지 우리가 해온 건 우리끼리 한 활동을 언론에 알리는 정도였는데, 이번 학생인권조례 선전전은 직접 사람들을 만나면서 일대일로 이야기하고 반응을 직접 보니까 되게 신기하다.”

그렇다고 결코 쉽지는 않다. 거리에 나선 청소년들은 시민들의 무관심에 무수히 상처받기도 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막막한 벽을 느끼기도 한다.

다영은 “수모도 많이 겪고 울기도 많이 울었다”고 말을 꺼냈다. “서명을 하고는 서명지를 찢어서

내 얼굴에 던지는 사람도 있었고, 서명해 준다고는 서명지에 엑스를 찍찍 긋고 비웃으면서 가는 사람도 봤다. ‘애들은 맞아야 돼!’ 이런 분도 많이 봤고, 우리한테 빨갱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 진짜 상처받는 건, 눈썹 완전 찡그리면서 눈도 안 마주치고 ‘스’ 지나가는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한테 내가 기피대상이 된 게 너무나 슬프더라.”

청소년 활동가 ‘매미’도 자신의 경험을 보탤다. “대학로에서 서명을 받는데 현직 교사라는 분과 10여 분간 토론을 한 적이 있다. 나는 왜 이게(학생인권조례) 중요한지, 그 사람은 왜 이게 되면 안 되는지. 토론 끝에 그 사람이 ‘아, 그럴 수도 있군요’ 하더라. 그래서 ‘그럼 서명 해주시겠어요?’ 했더니 ‘근데 전 동의 안 해요’ 하고 가버리더라. 허무했다.”

청소년 활동가 ‘아즈’는 교대에서의 ‘쓰디쓴’ 경험을 잊지 못하는 듯 거듭 이야기 했다. 그는 “교대 졸업식에서 서명을 받는데, 교대 학생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니들이 교생실습 한번 나가봐라, 애들은 맞으면서 키워내야지. 학생인권이 뭐가 중요하냐. 학생은 인권 없어도 돼’ 이러더라”며 “그런 사람들이 초등학교 교사가 된다는 사실에 정말 충격 먹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들은 “청소년도 주민발의에 참여할 수 있고 효력이 있었으면 벌써 8만 명한테 서명 다 받고 주민발의도 통과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조례 발의자로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없는 현실을 아쉬워하기도 했다. 매미는 “지나가다 교복 입은 학생이나 중고등학생들에게 학생인권조례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인다”며 “청소년을 위한 법인데 청소년이 직접 관여를 못할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을 향해 “본인이 청소년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관심을 갖고 참여해 달라”는 ‘호소’를 하기도 했다.

아즈는 “인권조례 제정으로 자녀나 조카, 동생 등 학교 다니는 지인이 숙제 안 해왔다고 이십 대씩 맞는 일 없이, 좀 더 즐겁게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된다. 그런 생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영도 “우리가 선전전을 할 때, ‘교육이 바뀌고 학교가 바뀌면 사회가 바뀐다. 학교부터 인권적인 공간이 되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변화하겠나’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며 “학교 다닐 때 그 분노 그대로 가지고 가서 주민발의 서명운동으로 터뜨려 달라”고 강조했다.



서울본부는 지난해 10월 26일부터 시민들을 상대로 학생인권조례제정 서명작업을 펼쳐왔다. 서울시 유권자 1% 이상의 서명을 받으면 교육청은 조례안을 정식으로 시의회에 발의해야 하며, 서명 기한은 오는 4월 26일까지이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제정 주민발의 청구인 서명용지는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홈페이지 (www.sturightnow.net)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만19세 이상 서울시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한겨레] 서울학생인권조례를 위해 / 홍세화

등록 : 20110403 19:37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제정 청구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 글을 쓰는 점을 독자들은 용납해주기 바란다. 시민의 힘으로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발의할 수 있도록 청구인 명부 작성을 시작한 게 작년 10월27일이다.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은 탓이 크겠지만 서울시 투표권자의 1%인 8만2000여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 6개월 법적 시한이 4월26일로 다가왔다. 그러나 4월3일 현재 취합된 서명자수는 3만도 채 되지 않는다. 자칫 6개월간의 노력이 허사가 될 판이다. 수구세력의 “너희들, 목소리만 클 뿐, 역시 무능해!”라고 비아냥대는 소리는 집어삼킨다 해도 “우리가 바라는 사회는 남이 대신 마련 해주지 않는다. 우리 자신이 만들어간다”는 믿음을 가진 주체적 시민들의 직접민주주의 시도가 수포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면 참담한 심정을 감추지 못하겠다.

우리는 광신자들보다 더 열성적인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데, 광신자의 뒤를 이어 열성적인 사람은 극우세력과 사익추구집단이다. 거둬 강조하지만, 광신과 극단주의, 그리고 사익추구는 그 자체에 열성이 담겨 있는 반면, 인권과 민주주의, 공익과 사회정의는 그 안에 열성이 담겨 있지 못하다. 우리가 인권과 민주주의, 공익과 사회정의를 지향할 때 그 자체에 담겨 있지 않은 열성을 의지로 결합시켜야 하는 이유인데, 이는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이 깨어난 민주시민의 징표가 되는 까닭이기도 하다.

사람은 누구나 궁극적으로 자기 몸이 놓이는 자리에 관심을 갖는다. 우리 몸이 놓이는 모든 자리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충족시키길 바란다면 그 출발요건은 인권 존중에 있다. 민주주의가 우리에게 끝없는 여정을 요구하는 까닭이 우리 몸이 자리하는 삶의 모든 현장, 곧, 집터, 일터, 배움터에서 우리 모두 주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라면, 학생들의 배움터이며 교사들의 일터인 학교가 민주적인 공간이 되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고 그 일차적 요건은 거기에 몸 자리를 두는 모든 이의 인권이 존중받는 데 있다.

무엇보다 학생들이 배움터인 학교에서 차별과 폭력에서 벗어난 몸 자리에 익숙해지도록 해야 한다. 내 인권이 존중받을 때 남의 인권을 존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중요한 삶의 거처인 학교에서 주입식 양기교육에서 벗어나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힘을 기를 때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으며, 나아가 노동자의 권리, 소수자의 인권에 관해 배우고 존중하려면 배움터인 학교에 인권의 가치가 함차게 살아 숨쉬어야 한다.

학생인권이 이른바 교권과 충돌한다고 보는 일부 주장이 있다. 그것은 우리 근대교육이 군국주의 일제 강점기에 뿌리내린 역사 과정을 인식하지 못한 데서 온 단견에 지나지 않는다. 교사들이 자기 일터인 학교에서 주인 되기를 바랄 때 먼저 해야 할 일은 권위적, 관료적 공간으로 남아 있는 학교를 민주적 공간이 되도록 하는 일로서 그것은 학생인권 신장과 같은 선상에 있다. 내가 존중받을 때 남을 존중하듯이, 내가 복종할 때 남에게도 복종을 요구하는 법, 억압에 맞서기보다 복종을 내면화한 교사일수록 교권을 내세워 학생들에게 복종을 강요하는 게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시민들의 자발적 발의에 의한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투표권이 없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성세대

들이 앞장선다는 점에서 ‘내 자식 이기주의’를 벗어난 ‘세대간 연대’의 멋진 예가 될 것이다. 지금 서울시의회 구성으로 볼 때, 시민발의 요건만 충족시킨다면 조례 제정은 가능할 것이다. 이 글을 읽는 서울시민들께 청구인이 되어줄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www.sturightnow.net에 접속하여 청구인 명부 서명지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정해진 주소로 수신인부담으로 보내면 됩니다.)

<르몽드디플로마티크> 한국판 편집인 / hongsh@hani.co.kr

[한겨레] 민주주의의 비참과 학생인권조례 / 배경내

배경내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집행위원장

등록 : 20110425 19:57



서울에서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서명자가 무려 25만명을 돌파했다고 한다. 반면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서명은 원래 마감일을 하루 앞둔 25일까지 법적 요건인 8만2000명조차 채우지 못했다. 선거기간과 맞물려 마감일이 2주 연장됐지만 성공 여부는 불투명하다.

주민발의 실패가 가져올 파장은 만만치 않다. ‘서울시민 1%도 찬성하지 않는 진보’라는 보수의 조롱거리가 되는 비참은 그럴다 치더라도, 서명에 참여한 시민들이 진보의 무능을 탓하는 일은 두렵다. 가장 참담한 것은 청소년들이 진보와 기성세대의 ‘외면’을 지켜보게 될 일이다. 자기에 관한 일인데도 법적 서명 권한이 없어 기성세대의 동참을 호소할 길밖에 없는 청소년들이 진보와 기성세대에 대한 신뢰와 환멸 가운데 무엇을 택할 것인지는 주민발의의 성공 여부에 달려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단지 학생을 위한 조례가 아니다. 선거 때만 되면 너도나도 젊은이들의 정치 무관심을 탓한다. 그러나 무려 12년 동안 사회와 정치에 관심을 가질 기회를 봉쇄당하는 학생들의 삶을 바꾸려는 노력은 부족하다. 독일 대통령이 16살 때부터 정당활동을 시작했다는 이야기, 미국에서 18살 고3 학생이 최연소 시장으로 당선됐다는 이야기는 여전히 먼 나라 일이다. 판단하지 않는 것을 마치 중립인 양 오해하는 이들을 대거 양산하는 교육을 내버려두고, 동료 학생이 여럿 죽어나도 서남표 총장의 개혁은 실패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우등생들을 만들어내는 교육을 두고 민주주의의 미래는 가능할까.

모든 역사적 변화는 ‘질문’에서 비롯됐다.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는가? 여성은 왜 교수대에는 오르면서도 연단에는 오를 수 없는가? 교사는 왜 노동자가 아닌가? 몸의 손상이 아니라 사회적 장벽이 장애를 만들어낸 것은 아닌가? 애초 위험하기 짝이 없었던 이런 질문들이 진보를 일궈온 거름이었다. 변화를 꺼리는 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도 질문을 품는 이들의 출현이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에게 생각하고 판단할 기회를 주자고 한다. 권력에 대한 두려움이 미세혈관을 타고 온 몸을 휘돌아 결국 사고를 정지시키도록 만드는 갖가지 규제와도 결별하자고 말한다. 학생인권조례가 등장하자마자 <조선일보> <동아일보>를 비롯한 보수언론들이 ‘촛불’을 떠올린 까닭이다. ‘학생은 공부나 해’, ‘비판적 사고방식은 지금 필요 없다’는 말들이 맹위를 떨치며 침묵과 미성숙을 강요당하는 학교에서 질문이 파릇파릇 피어날 수 없다. 그들은 예민하게 진실을 포착했다.

질문이 봉쇄된 자리에 남은 것은 폭력과 강제의 악순환이다. 지난 24일 <문화방송> 시사프로그램에서 방영된 ‘공포의 집합’ 장면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폭력과 그 대물림 과정을 정확하게 보여준다. 선배를 무시한다는 이유로 후배들에게 막무가내 구타를 가하면서도 선배는 그 행동을 ‘매’라고 부른다. 후배들은 선배의 ‘가르침’에 감사하다고 답한다. 극소수 대학과 학과에서만 일어나는 극단적인 사례가 아니다. 선도활동을 벌이다 후배를 숨지게 한 고교 학생회장 이야기, 운동부 코치의 훈육으로 목숨을 잃은 초등학생 이야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잘못을 바로잡는다’는 이유로 용인되는 폭력은 도처에 깔려 있다. 학생 사이의 폭력에 대해선 대대적 소탕작전을 벌이는 나라에서 폭력의 화수분 노릇을 하고 있는 학교의 폭력에는 그토록 관용적인가.

학생인권조례가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지는 못해도 변화의 포문을 열리란 건 분명하다. 다시 2주간 역전만루홈런의 기회가 찾아왔다. 주민발의 방식이 함부로 길을 나선 것이었는지에 대한 판단은 잠시 미루어두자. 바로 지금, 아직 서명하지 않은 서울시민은 주민발의 사이트(www.sturightnow.net)에 접속해 참여하면 되고 이미 서명한 사람은 한 사람씩만 더 모으면 된다. 무장 타오르는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과 신뢰할 만한 기성세대가 존재한다는 믿음을 청소년들에게 보여주기에도 아직 늦지 않았다.

배경내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집행위원장

<한겨레신문>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참여해요”

[한겨레] 김태형 기자   등록 : 20110419 20:23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소속 학생들이 19일 오전 서울 [청계광장](#)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발의 동참을 [호소](#)하는 거리 [공연](#)을 펼치고 있다. 참가 학생들은 “주민 참여로 시조례를 발의하려면 서울시 유권자의 1%인 8만2천여명의 서명이 필요한데, 오늘까지 4만여명이 참여했다”며 [청계광장](#)에서 수유리 4.19국립 [묘지](#)까지 시민들의 참여를 촉구하며 행진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경향신문>

[경향마당] 학생인권조례, 2주간의 ‘희망 고문’을 생각하며

이계삼 | <오늘의 교육> 편집위원 5월 2일 (월)

대한민국 가정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뭐니 뭐니 해도 교육 문제일 것이다. 조변석개하는 입시 제도와 사교육 열풍을 따라가려면 부모들은 교육 제도를 연구하고 공부해야 할 정도이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모두 ‘교육전문가’라는 우스갯소리마저 생겼다.



이렇게 교육에 관심이 많은데도 근래 좀 의아하고 기묘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다름아닌 주민발의로 진행되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정 청구인 모집에서다. 정족 인원수는 서울시 주민 1%에 해당하는 8만1858명이지만 마감일인 4월26일 현재 7만명도 채우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

세계 최고의 교육열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하다니, 보수 언론들은 이를 두고 기다렸다는 듯 쾌재를 부르며 “거 봐라~” 하며 몰아칠 태세다. 아무리 생각해도 예상 밖이고 의아한 일이다.

내가 보기에 학생인권조례를 가장 싫어하는 이들은 보수 언론이 아니라 교사 집단이다. 표정 관리를 하고는 있지만 스스로 진보적이라 자부하는 교사들도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다. 교사들은 자신들이 피해자이자 수난자라고 느끼고 있다.

수업을 방해하는 아이들, 대들거나 통제가 안되는, 교육불가능한 교육 현장에서 교사 집단이 기댈 수 있는 거의 마지막 남은 권능이 바로 ‘교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사들은 학생인권을 보장해 주면 결국 교권이 무너진다고 믿고 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가장 강력한 파트너가 되어야 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거의 무기력했던 것도 이런 흐름의 반영일 것이다.

“아이들은 때려야 말을 듣는다”고 믿고 있는 분들에게는 할 말이 없다. 다만 학생인권과 교권을 대립시키는 사고방식이야말로 이번 조례제정운동에 가장 큰 장애물로 작용했다. 이것은 대단한 오해이며, 허위라는 사실을 여기서 말하고 싶을 따름이다.

통제가 안되는 아이를 회초리로 누를 수 있는 권능은 교권이 아니다. 교권이란 아이들을 존중하고 사랑할 때, 아이들이 부여해 주는 도덕적 권위이다. 학생인권과 마찬가지로 지금껏 교육 현장에서 는 교권도 없었다. 교권을 위해서라도 학생인권조례는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4월26일로 종료되었어야 할 학생인권조례 제정 청구인 모집 기한이 4·27 재·보선 선거로 두 주가 연장됐다. 대한민국의 미래 동량들이 존중받고 자신들의 꿈과 이상을 키워갈 수 있도록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청구인 모집에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한다. 5월11일까지 학생인권조례제정 서울운동본부(<http://www.sturightnow.net>)를 방문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학생인권 조례제정 청구인이 되어주었으면 한다. 이는 위기에 빠진 교육현장을 구하는 첫걸음이자 교권과 학생인권을 바로 세우는 초석이기 때문이다.

<참세상>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전교조도 안 될 거라 했었다”

서울본부, 8만5천 청구인 명부 서울시교육청에 접수

김도연 기자 2011.05.20 13:58

서울시교육청 현관이 눈물바다가 됐다. 청소년 활동가들은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성사로 학생인권에도 봄이 왔음을 알리며 이내 눈물을 쏟았다.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서울본부)가 20일 서울학생인권조례 청구인 명부 제출에 앞서 서울시교육청 1층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날 “주민발의 성사로 경기도에 이어 서울에서도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는 현실이 바로 우리 눈앞에 왔다”며 “차별과 폭력으로 얼룩진 학교가 인권과 민주주의가 살아 숨 쉬는 학교로 변화할 수 있음이 증명되었다”고 주민발의 운동의 성사를 알렸다.



이 자리에서 6개월 동안 직접 거리서명에 나섰던 청소년 활동가들은 하나같이 “실감이 안 난다”며 기쁨의 눈물을 터뜨렸다.

예술 청소년 활동가는 “전교조도, 서명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다들 (주민발의 성사가) 안 될 거라



▲ 청소년 활동가들이 서로 눈물을 닦아주고 있다.

고 그랬다”며 “그래도 우리는 ‘주민발의 운동을 하는 거 자체가 의미 있겠지’ 하고 했는데 진짜 성사가 되니까 실감이 안 난다. 너무 좋다”고 말했다.

다영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도 “20일에 이렇게 주민발의 성공했다고 보고대회를 하고 있는 이 상황이 아직도 꿈만 같다”고 전했다. 다영은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8만 2천이 모여서 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할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오늘 이렇게 하게 돼서 너무 다행”이라며 “지지해주신 서울시민들께 너무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다.



▲ 다영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는 “거리에서 시민들을 설득하고 서명을 받아야 하는 게 너무 힘들었다”면서도 “아직 못 만난 시민 분들에게는 너무 죄송한 마음도 있다”고 말했다.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성사로 현장 교사들의 역할은 더욱 막중해졌다. 이병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장은 “이번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주민발의 성사는 87년 6월 항쟁으로 대통령 직접선거를 하게 된 정도의 비중과 의미가 있다”며 “교사들의 일터이자 학생들의 삶터인 학교에서 인권이 꽃피울 수 있게 열심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서울본부는 서울시민 8만5천821명의 서울학생인권조례 청구인 명부를 시교육청에 제출했다. 시교육청은 명부 검증을 거쳐 서울본부의 조례안이 주민발의 요건을 갖추면 60일 이내에 서울시의회에 해당 조례 안건을 제출해야 한다.



▲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청구인명부가 담긴 상자를 시교육청으로 나르고 있다.

서울본부 측은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시의회를 무난하게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며 “2004년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조례, 2009년 서울광장조례에 이어 세 번째로 성사된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서울지역

에서 주민발의로 제정된 최초의 조례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들은 또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유치원까지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두발자유, 집회시위의 자유 등 경기도학생인권조례가 학생 권리를 축소한 부분도 바로잡았다”며 “서울시민의 뜻으로 쓰인 서울학생인권조례제정 주민발의안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키라”고 시의회에 요구했다.



[한겨레] [세상 읽기] '도가니'와 학생인권조례 / 금태섭

등록 : 20111002 19:22

학생인권조례는 반성문이다

교육현장의 짓밟힌 아이들에게 내미는 최소한의 반성문이다

영화 한편이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있다. 청각장애 학생들을 성폭행한 교사들, 그리고 누구도 정당하다고 말할 수 없는 법정의 결론. <도가니>를 본 관객들은 어떻게 대명천지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격분하고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묻는다. 원작인 소설이 다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정치권에서는 '도가니법' 제정이 추진되기까지 한다. 대법원장이 영화를 봤고 당시 재판에 관여했던 판사, 검사, 변호사가 언론에 해명을 했다. 검찰총장도 이 영화에 대한 질문이 예상되는 대검찰청 국정감사를 앞두고 영화를 관람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 금태섭 변호사

“영화가 고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재판과정을 사실과 조금 다르게 보여준 점도 있어서 사법신뢰가 근거 없이 훼손된 점이 안타깝다”는 대법원장의 발언이 나왔고, 아동에 대한 성폭행이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었는데 피해자의 부모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밖에 없었다는 재판장의 해명이 있었지만 성난 여론을 잠재우기에는 턱도 없는 것 같다. 원작자인 공지영이 썼듯이, “집행유예로 석방되는 그들의 가벼운 형량이 수화로 통역되는 순간 법정은 청각장애인들이 내는 알 수 없는 울부짖음으로 가득 찼다”는 말을 듣는 순간 누구나 가슴에 찢린 듯한 아픔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 앞에서 법 규정의 미비나 부모의 합의를 내세우는 것은 그야말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다. 잘못된 법을 내버려두고 있던 것을 포함해서 모든 것이 우리의 책임이다.

좀더 깊이 들어가서, 이런 일이 벌어진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 무엇보다도 인권에 대한 경시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생각한다. 아이들을 훈육의 대상으로만 보고 하나의 완전한 인격체로 대접 해주지 않는 풍토가 교육 현장에서 이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바탕이 된 것이다. 소설 속에서 자애학원의 생활지도교사는 학생의 손을 돌아가는 세탁기 통에 넣는 체벌을 하려고 하다가 동료 교사가 대체 뭐 하는 짓이냐고 묻자 이렇게 대답한다. “교육중입니다.” 물론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 극단적인 사례를 든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과연 우리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절대로 벌어지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 학생들이 기분풀이 대상이나 더 나아가 노리개로 다루어지는 영화 속 장면이 정말로 낯익은 모습이 아니라고 자신할 수 있을까.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이 최근 서울시의회에 제출됐다. 서울시교육청에서도 다음달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한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 안들이 학생의 권리만 강조한 것으로서 체벌 전면 금지, 교내 집회, 두발·복장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등을 허용하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수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한다. 도대체 왜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져야 하는지 정말 모르는 걸까. 영화 <도가니>에서 다루어진 사건이 어디 먼 나라에서 일어났던 일이라고 생각하는 걸까. 학생들의 인권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당연한 내용의 조례를 만드는 일에 그렇게까지 어깃장을 놓아야 하는 걸까.

인화학교 사건에 실제로 관여했던 판사, 검사, 변호사만을 비판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우리 모

두가 책임을 느껴야 한다. 아이들에 대한 차별은 필요하고 학생은 '지시'에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는 우리 사회의 잘못된 인식이 낳은 괴물 같은 사건이 인화학교 사건이다.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다른 곳도 아닌 교육현장에서 짓밟힌 아이들 앞에 어른들이 내밀 수 있는 최소한의 반성문이다. 영화 <도가니>를 보고 나서도 아이들의 인권에 관한 조례를 반대할 수 있는 사람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진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중의소리>

청소년 활동가 "시의원 마음대로 인권조례 수정, 배신감 느껴"

김용재 기자 / 입력 2011-12-19 10:35:03 / 수정 2011-12-19 10:43:15

서울시의회 교육상임위에서 당초 16일 통과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었던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원안에 대한 의원들의 입장차로 19일로 연기됐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금지, 임신과 출산에 의한 차별 금지, 집회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 주요 4가지 쟁점과 두발 및 복장의 자유, 휴대전화 소지 등의 문제에 대한 의원들간의 입장차가 심하고, 종교 단체 등의 반대가 심해 원안 통과는 힘들 전망이다.

심의를 하루 앞둔 18일, 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의 활동가이자 서울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에서 직접 조례의 주민발의를 위해 발로 뛰었던 청소년 '검은빛(별명)'과 전화 인터뷰를 통해 현재 심정을 들어 보았다.

검은빛은 지금의 상황에 대해 "청소년 등의 활동가들이 주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루어 낸 서명인데, 이것이 어른들의 정치적인 입장과 이해관계에 의해 마음대로 삭제되고 축소되는 상황이 너무 화가 난다"며 "청소년들은 방청도 못 하게 하고 심지어 (인권조례의 주체인 청소년과)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시의원들끼리 정하는 것은 청소년들이 무시당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특히 반대측 시의원들에 대해 "반대하는 논리가 매우 저급하다. 시의원들이 인권에 대한 최소한의 감수성도 없다"고 불편한 심정을 드러냈다.

또 "이들이 학교에 다니던 시절에는 학교 안에서 인권을 접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인권의 중요성을 못 느끼고 왜곡된 인식을 갖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학교 안은 인권의 무법지대"라며 "학생들이 인권을 존중받아야만 교권과 학습권도 존중받을 수 있다"고 말한 그는 "교권침해 등이 발생하는 것도 학생과 교사가 서로 존중하고 소통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학생인권조례가 이같은 문제 해결의 첫 출발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검은빛' 활동가와의 일문일답이다.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운동을 이끌어온 청소년활동가 '검은빛'은 18일 최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조례 수정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분통을 터뜨렸다.

-주민발의 운동에 참여한 까닭은?

"학생인권조례 자체에 찬성하고 지지하는 입장이었다. 올해 2월에 서명받기가 힘들어져 '좌초 위기'라는 말이 나돌 때 힘을 보태기 위해 참여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게 가장 크다. 이외에도 주민발의는 시민운동의 기초이기 때문에 참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다."



-주민발의를 하며 가장 힘들었던 것은?

"서명을 받을 때 (반대하는 사람들이) 면전에서 설문지를 찢거나 던지기도 하고 인권침해 발언도 했다. '학생들이 맞아야지'라거나 '학생들이 뭘 알겠어'라는 등의 말도 견디기 힘들었다. 내부에서 (주민발의 성사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이 나올 때도 힘들었다."

- 인권조례 원안 통과가 힘들어 보인다.

"(인권조례 본부의) 입장은 원안통과 고수인데 수정안이 될 것 같아서 많이 힘들다.

우리는 원안을 보고, 원안에 동의하고, 원안을 위해 서명을 받았다. 9만여명의 서울 시민 역시 원안을 지지하고 원안에 서명했다. 그 내용이 누군가의 마음대로 바뀌는 상황에 대해 서명 활동가와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들 모두 상실감과 허탈함,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가장 화가 나는 부분은 청소년 등의 활동가들이 주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루어낸 서명이 어른들의 정치적인 입장과 이해관계에 따라 삭제되고 축소되고 있다는 것이다. 청소년들은 방청도 못 하게 하고 이야기도 한 번 안했다. 시의원들은 청소년과의 논의 자리 한 번을 마련하지 않았다. 이렇게 청소년들과 직접 대면하지도 않고 자기네들끼리 정하는 것은 청소년들이 무시받는 것이라 생각한다.

사실 (원안통과를) 지지하는 의원들도 수정안을 내고 있기는 하다. 그들이 그러는 이유는 이해가 간다. 고맙고 지지하고 있다. 하지만 원안이 수정안으로 가는 상황 자체가 너무 섭섭하고 비참하다."

-학생인권조례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원론적인 이유는 역시 학생들의 인권이 지켜져야 하기 때문이다. 학교 안에서도 밖에서도 학생들의 인권은 존중받아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수능 때문에 자살하고 학교 안에서 동성애자라고 차별받다 자살하고, 학교에서 뛰쳐 나오는 청소년들도 해마다 엄청나게 많다. 그런 면에서 지금 학교 안은 굉장한 인권의 무법지대이자 사각지대다. 학생들이 그렇게 내몰리고 있다.

또 학교는 교육을 받는 공간이다. 학교는 학생들이 민주주의를 배우고 자신의 인권을 존중받으며 교육받을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학생들이 인권을 존중받아야만 학습권도 존중받을 수 있게 된다. 학생인권조례가 이런 문제 해결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교권 침해'라는 시각도 많다. 이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

"(교권 침해같은) 일이 벌어진 것은 아주 예전부터다. 이런 것이 부각되어 이슈화가 된 게 지금일 뿐이다. 오히려 그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야말로 학교 내부가 인권의 사각지대이기 때문이다. 학생

과 교사 모두 인권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 학생들은 억압적으로 눌러왔고, 학생과 교사가 전혀 소통할 줄을 모르고 있다. 서로 소통하고 합의점을 만들어 이끌어 나가는 그런 방법이 학교 현장에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인권조례를 반대하는 시의원이나 여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반대하는 의원들의 논리가 굉장히 저급하다. 명색이 대한민국 시의원인데 인권에 대한 최소한의 감수성조차 없다. 인권에 대해 무지한 사람들이다. 저급하다. 이들의 논의 수준에 대해 많이 실망했다. 사실 그렇게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막상 보니까 심각하다.


사실 이들이 그렇게 인권 감수성이 떨어지는 것도 인권을 접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자기 세대의 학교 안에서 접할 수 없었기에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를 왜곡해서 인식하거나 별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오마이뉴스>

[서울학생인권조례, '애정남'이 결정한다고?](#)

[\[서울시학생인권조례①\] 인권조례, 원안 그대로 제정돼야 합니다](#)

11.12.15 14:31 | 최종 업데이트 11.12.15 14:31

 [전혜원 \(jhw3762\)](#)

서울시학생인권조례안이 오는 16일 서울시의회 교육상임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을 시작으로 19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서울시학생인권조례안을 두고 많은 논란이 일고 있어, 본회의 처리 결과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청소년들의 글을 2회에 걸쳐 실습니다. <편집자말>



▲ 지난해 7월7일 오후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학생인권 발족식 및 토론회를 열었다. © 최인성

세상에는 참 애매한 것들이 많습니다. 일단 저부터 좀 애매한 인간입니다. 제 주변에 있는 1993년생 동갑내기 친구들처럼 저 역시 19살의 청소년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3은 또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초·중·고 시절을 12년에 걸쳐 마치지만 저는 그냥 10년 4개월 만에 끝내 버렸습니다. 학교에서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지만 내년에는 대학생이 됩니다. 그것도 세상에서 말하는 명문대. 이렇게 애매한 나의 정체성을 정리해줄 단어들이 있습니다. 자퇴생, 검정고시생, 탈학교 청소년, 예비 대학생, 혹은 잉여.

대학생활을 코앞에 두고 있는 제가, 이제는 '고딩'이라는 단어를 쓰기엔 조금 어색해진 제가, 나 이 앞에 '1'이라는 숫자를 달고 다닐 날도 20일밖에 안 남은 제가 지금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바로 '학생인권조례'입니다.

가방끈도 짧은 데다, 글 쓰는 재주가 부족한지라 글의 앞부분만 읽고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르실 듯하여,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딱 한마디를 먼저 하겠습니다. '서울학생인권조례를, 원안 그대로,

훼손 없이, 당장 제정하라.'

여기까지만 읽어 주셔도 참 좋겠습니다. 이 잉여의 19살 청소년이 왜 이를 악물고 학생인권조례 이야기를 시작하는지 궁금하다면 조금 더 머물러 주셔도 좋습니다. 학교에 다녀 본 경험이 있다면, 그때를 기억하며 글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시절이 행복했다면 왜 행복했는지를 떠올리며, 그 시절이 불행했다면 왜 불행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곱씹으며 제대로 된 서울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을 위해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조례에 담긴 9만7702명의 마음

여기에 9만7702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 여름 서울시민 1%의 서명이 담긴,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주민발의 청구인 명부를 서울시교육청에 제출했습니다. 그중 유효판정이 난 서명자의 수가 9만7702명이었습니다. 무효 서명까지 더한다면 10만여 명이 넘는 시민들이 서울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을 위해 기꺼이 함께 했습니다.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은 전국 최초의 학생인권조례인 '경기학생인권조례'가 놓친 부분까지 세세하게 챙기며, 국제인권기준과 국제법까지 꼼꼼하게 검토하여 완성된 결과물입니다. 조례를 적용받는 학생의 범위를 확장시키는 것은 물론, 제한요건의 삭제 등으로 '경기학생인권조례'보다 한 발 더 진보한 조례안이 탄생했습니다.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이 학생인권보장의 유일한 해결책이 되지는 못하겠지만 첫 제도적 성과라는 의미가 큼니다. '학생인권조례' 없이는 학생인권을 이야기하는 것조차 힘든 부끄러운 세상에서,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을 학생인권조례안입니다.

그런데, 낡은 교육의 변화를 원하는 10만여 명의 서울시민들, 오랫동안 학생인권을 위해 땀 흘려 온 사람들, 교육주체들, 그리고 130만 서울 청소년들이 너무나도 애타게 기다려 왔을 그 서울학생인권조례가 반쪽짜리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당연한 말들을 나열해 놓은 조례안이어서 고개가 끄덕여지는데 다른 이들은 그게 아닌가 봅니다. 63개 보수 교원·학부모·시민단체로 구성된 '학생인권조례 저지 범국민연대'는 지난 13일, 서울학생인권조례의 부결을 요구하며 서울시의회에 청원서를 냈습니다.

게다가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 제1절 6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 부분에서 성적 지향과 임신 또는 출산 항목을 삭제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옵니다. 이 조항을 삭제하지 않는다면 서울학생인권 주민발의안은 오는 16일에 있을 교육상임위원회 통과가 불투명하고, 그렇게 되면 시의회 본회의(19일)에 상정조차 될 수 없습니다.

너덜너덜해질 인권조례, 상상하고 싶지 않다

그 중요성을 일일이 나열하기도 벅찬 서울학생인권조례안은 올해 처리되지 못한다면 부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낡디낡은 교육의 변화를 위해 마음을 모았던 10만 서울시민들의 요구와 130만 서울시 청소년들의 열망은 그렇게 무참히 짓밟힐 위기와 마주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서울학생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하고 학생으로서 감히 임신과 출산을 하게 만드는 조례라고 합니다. 단체로 난독증에 걸리기라도 하셨나 봅니다.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 그들에게는 임신과 출산을 하라는 말과 같은 것인가 봅니다.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 단체로 성소수자가 되자는 말과 같은 것인가 봅니다.



그들의 상상력은 저를 경악하게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학생들을 차별과 폭력의 상황에 내몰지 않게 만들어야 할 학생인권조례가, 일부 조항이 빠진 상태로 통과된다면 학생인권조례 스스로가 차별을 재생산해 낼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차별로 얼룩지고 너털너털해질 학생인권조례, 상상하고 싶지 않습니다.

▲ '학생인권조례 저지 범국민연대'가 지난 8일 오전 서울시의회 앞에서 발대식을 겸한 기자회견을 했다. 이날 한국교총을 비롯한 교원, 학부모, 시민사회단체 등의 참석자들은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안 주민발의안의 부결을 촉구했다.

© 연합뉴스

결혼식 축의금으로 3만 원을 내야 할지, 5만 원을 내야 할지에 대한 기준은 애매할 수 있습니다. 애인의 관심과 집착의 기준은 애매할 수 있습니다. 허나, 학생을 향한 매와 사랑을 구분하는 것은 애매해질 수 없습니다. 더욱이 '인권'은 애매해질 수 없습니다. 인간이라면 그 어떤 단서 조항도 달지 않은 채,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가 바로 '인권'이기에, 그것은 더 확고해지고 명확해져야만 합니다.

학생인권조례가 그 애매함의 딜레마에 빠져 있는 동안 세상과 학교 그리고 학생들 스스로는 자신의 정체성을 자꾸만 지워가게 될 것입니다. 분명 살아 숨쉬며 존재하지만 마치 태초부터 없던 존재인 것처럼, 스스로를 보이지 않게 가두고 학교와 사회가 요구하는 모습으로 스스로를 지워갈 것입니다. 그렇게 그 영롱한 빛들이 제 색을 잃은 채 바래져만 갈 것입니다.

그 어떤 학생도 차별하지 않고, 배제하지 않는 서울학생인권조례는 마치 투명인간처럼 살아왔던 내 자신의 존재를 그리고 내 친구들의 존재를, 이제는 있는 그대로 인정하라는 요구입니다.

훼손 없는 인권조례 제정을 기대합니다

학교와 사회가 정해놓은 기준에 의해 스스로를 끊임없이 억누르고 없는 존재인 것처럼 여겨져야 했던 시간들을 지나, 10대를 보내는 마지막 순간에서야 마주할 수 있었던 내 자신에게 보내는 마

지막 위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오늘날 학교에 다니고 있을 학생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과거 학교라는 공간에서 성적지향을 이유로, 종교의 이유로, 성적을 이유로 그렇게 그 견고한 기준과 고정관념, 통제와 폭력으로 인해 끊임없이 존재를 부정해 왔을지도 모를 당신이 그때의 내 자신에게 바칠 수 있는 최초의 참회록이자, 기성세대로서의 당신이 지금의 우리에게 내릴 수 있는 최소한의 반성문입니다.

학교 안에서 단 한 순간도 온전히 '내 자신'일 수 없었던 시간들을 보내며 끝으로 당신에게 묻습니다. 기독교 학교에 다닌다는 이유로 강제적으로 예배를 들어야 했던 순간,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는 그렇게 지워져도 되는 것이었냐고. 학생 주제에 '감히' 임신을 하고 출산을 선택하는 순간, '교육받을 권리가 있는 나'는 그렇게 지워져도 되는 것이었냐고. 벽장을 박차고 밖으로 나오는 순간, '차별받지 않을 나'는 그렇게 지워져도 되는 것이었냐고.

누구에게 얼마만큼의 권리를 줘야 할지, 그것이 부여해도 팬찮을 권리인지 저울질할 자격이 그 누구에게 있는가. 장황한 설명과 변명은 절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없습니다. 이제는 훼손 없는 서울학생인권조례의 제정으로 대답할 차례입니다.

© 2011 OhmyNews

[한겨레] '서울학생인권조례' 시의회 통과

김민경 기자

등록 : 20111219 20:30 | 수정 : 20111219 22:52



»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의 원안 통과를 요구하며 19일 오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로비에서 시위를 벌이던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와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인권단체연석회의 소속 학생과 회원들이 원안과 유사한 수정안이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전국 3번째... '집회 자유' 첫 포함 '성적 지향 차별금지' 원안 그대로

집회의 자유 보장,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학생인권조례안이 19일 서울시의회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는 1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찬성 54표, 반대 29표, 기권 4표(재석 의원 87명)로 서울학생인권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경기, 광주에 이어 세번째다. 서울시민 9만7000여명이 서명한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을 일부 수정해 이날 본회의에 제출된 수정동의안에는 전국 최초로 '학생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그동안 보수단체들이 반대해 논란이 됐던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주민발의안의 '학생은 ...<중략>... 임신 또는 출산,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는 조항 그대로 포함됐다. 학교 규칙으로도 두발을 규제할 수 없게 해 두발 자유화도 가능해졌다.

그러나 '복장에 대해서는 학교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 '학교규칙으로 학생의 전자기기(휴대전화) 사용 및 소지의 시간과 장소를 규제할 수 있다', '학교 내의 집회에 대해서는 학교 규정으로 시간, 장소,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등 일부 권리에 대해선 제한 규정을 뒀다.

이에 앞서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6일에도 학생인권조례를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처리를 미뤘다. 그러나 지난 주말 민주당 중앙당 쪽에서 ‘주민발의안 원안 통과’를 민주당 시의원들에게 요구했고, 이날 오전 시의회의 민주당 소속 의장단이 참여한 회의에서 당론으로 결정되면서 논의가 급진전했다.

배경내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은 “부분적으로 아쉬운 점이 있지만, 두발의 자유 전면 보장, 성적 지향 등에 따른 차별 금지, 집회의 자유 보장 등을 담고 있어 조례안 통과를 환영한다”며 “다른 지역의 인권조례 제정과 상위법 개정 운동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시의회에서 현장 여론을 고려하지 않고 조급하게 의결한 인권조례에 우려를 표명한다”며 “학생 학습권 침해, 교사 지도권 위축으로 학생지도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학부모와 교육 현장에서 우려가 많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20일 안에 이를 공포해야 하며, 조례안이 공포되면 일선 학교들은 조례에 맞게 학칙과 생활규정을 고쳐야 한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연합뉴스]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 여부 `측각`>

2011/12/23 20:08 송고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두발·복장 자율화, 체벌금지, 교내 집회 허용 등의 내용이 담긴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내년 3월부터 서울시내 모든 초중고교에서 적용될 예정인 가운데 조례가 예정대로 공포될지를 두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의결된 당일 서울교육청에 넘겨졌다. 교육청은 20일 이내인 내년 1월8일까지 조례를 공포하거나 재의 요구를 해야 한다.

교육청은 현재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마쳤으며 이대영 서울교육감 권한대행의 최종 의사결정만 남겨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19일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하자마자 보도자료를 내 "현장 여론을 고려하지 않고 조급하게 수정·의결한 주민발의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조례 추진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어 교과부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과부는 교육청의 결정을 지켜본 뒤 교육청이 조례를 공포하려할 경우 재의를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교육감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으로부터 재의 요구를 하도록 요청받은 경우 시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교과부의 방침에 따라 조례 도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교과부가 재의를 요구하면 시교육청은 자동으로 시의회에 재의 요구를 하게 되며, 이후 시의회가 재적의원의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인권조례를 다시 통과시켜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시의회에서 재통과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교육청이 재의 요구 방침을 정한 것은 아니다. 교과부로부터 학생인권조례 통과 이후에 어떠한 지시나 공문을 받은 것이 없다"고 말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육청에 어떠한 방침도 전달하지 않았다"며 "교육청의 방침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여서 교과부가 먼저 교육청에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순서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yjkim84@yna.co.kr